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 일시: 2020년 4월 17일(금) 19:00 - 21:00

■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유튜브

■ 사회 & 패널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 녹취록 생성: 유혜영

■ 녹취록 교열/교정: 박선미

안효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래에 대한 전망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사태가 유례없는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지난 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향후 어떤 세계에 살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성격, 이에 대한 현재 우리의 대응 그리고 이후 세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가나다 역순으로 소개해 드리죠. 경성대 전용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안효상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훈 **갑자기 생명을 위해서 경제를 스톱시킨 위기**죠. 경제를 멈출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렇게 될 거라며 비슷하게 기후위기와 연관시키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아진다고 연결시키기보다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일부터 탄소를 전혀 쓰면 안 된다, 어느 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전 세계가 모여서 탄소를 조금만 쓰면 지구는 다 죽는다, 이런 결정을 언젠가 내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효상 금민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금민 일단 **생태재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연구소 조사해 봐라,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유럽 지도자들도 점점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인간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약칭 UCL)에서 생물다양성을 전공하는 케이트 존스(Kate Jones)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에볼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심각하게 자연을 파괴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숙주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건 2년마다 되풀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팬데믹이 나왔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토론의 제목이 팬데믹 이후인가요?

안효상 코로나19 이후.

금민 사실 그 이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후가 있는 건지. 즉 제목이 잘못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팬

데믹 시대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 이후가 된다고 하면 그건 트럼프 적 사고방식이다. 2개월 지나면 괜찮아져요, 3개월 지나면 괜찮아져요. 백신이 나오는 1년 7개월 이후에는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을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위기에 의해서 실물경제가 수축됐고, 그게 파급을 일으켜서 금융수축,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 다 올 텐데, 이걸 정상상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비상상태라고 생각하더라도 2년간 비상상태면 그건 **뉴 노멀(New Normal)이에요.** 2년간 만들어진 경제질서는 2년 이후의 경제질서를 지배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는 이미 진입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인식의 출발점이 돼야 하지 않겠냐 싶고요. 경제 사이클과 코로나 사이클이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이클이 거의 경기 사이클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IMF가 경기전망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1% 정도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1/4분기 성장했다. 이게 OECD 1위입니다. 한국이 성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경제가 가동했거든요. 다른 나라 다 멈췄잖아요. -3%에서 -7%까지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올해도 이 상태 계속되면 -1% 성장. -1% 성장이면 상당히, 2012년 유럽 위기로 보면 거의 경제위기 상태죠. 근데 그게 OECD 1위 성장률이라는 거죠. 보건위기의 코로나 감염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일치한다, 사실 우리가 경제 따로, 방역 따로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일종의 방역경제, 코로나 경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상 전용복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전용복 앞의 두 분 선생님께서 생태위기가, 생태위기가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태계 일반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조금 독특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독특성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흔히들 재난조차도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맥락은 위험성, 사망 등등등 이런 부분에서 단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조차도 불평등하다,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가진 민낯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고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우선 봉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연쇄효과를 미쳐서 경제전체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괘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던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하고 서구의 다른 점은**,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멈춘 건 맞는데, 서구는 능력 대응을 하다가 집단감염 때문에 공장까지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중간재 수급의 어려움을 겪어서 조업이 단축되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느냐, 경제적으로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자 제조업 부분이 일단 멈췄죠. 근데 제조업 부분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고, 거기 고용돼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의 불안정 노동자였죠. 이 분들이 실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가 났습니다. 아침에 발표가 났는데, **3월 한 달간 160만 명이 임시 휴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직을 하고 일거리

가 없고 소득이 단절되니까 그다음부터 연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비를 못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지난 달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예금, 적금을 해약하는 건수가, 액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예금, 적금 또는 신용대출도 못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빛을 얻는 거겠죠.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시는 겁니다. 소비를 못하게 되면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수 부분이 망가졌는데, 내수를 담당하시는 분이 중소기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너진 거죠. 그다음으로는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부채 사회입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겠다는 금융권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러면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추가로 용통을 하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금융권도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는,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금융권까지 불똥이 튼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흔히 그냥 피상적으로 바이러스마저도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한테 빛지고 살아왔던 거였다, 다만 끝났던 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까발린 거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사회는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독특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상 잠깐, 제목에 대해 금민 소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설명해 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의 이후는 애프터(after)가 아니고, 포스트(post)라고 생각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세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상 세 분께서 큰 이야기, 이른바 생태재앙이라는 것과 전용복 교수님은 좀 더 특정하게 한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공기가 없어져야 공기가 필요하지 아는 것과 비슷하게. 강남훈 선생님은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확 이런 결정을, 기후위기에 빚대서, 탄소를 내일부터 쓰지 말자는 급격한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안효상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한 지역 중심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통제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처럼 보이고, 한국은 방역에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이에 비해 유럽, 미국은 초기 방역 실패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고, 이는 계속 말씀해주는 경제위기, 저는 이걸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위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경제적 재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 지속성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있게 해주시고,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요. 전용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복 경제재앙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원인이 자연재해 중의 하나인 바이러스 창궐로 발생했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경제위기 맞는데, 다만 그 형태가 과거랑 다른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금융 부분에서 먼저 금융위기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경제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는 형태를 띠었던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위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양적, 금융위기 이전에 실물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거고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약산업에 부과되던 제약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임상시험 절차는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보통 3상까지 하는데, 1상에 보통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백신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임상시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그걸 말하기 전에 **평가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하는 것이 죽음과 삶이 물리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남은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지속되고, 그래서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빚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가계든 기업든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부채를 진다면 설사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가 빛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 빛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보다 기업이 훨씬 낫고요. 왜냐하면 기업은 그래도 자금순환이 빠르고 크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개인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기업보다는 정부가 낫습니다.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빚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인 태도였죠.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주 독특하게, 나는 절대 빚을 지지 못하겠다는 스탠스(stance)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정부 부채를 지지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마지못해서 7조 약간 이상 빚을, 국채를 발행했는데, 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2차 추경에서는 조삼모사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책정돼 있던 예산을 빼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위기가 끝난다고 해도 더 큰 고통을 민간 부분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채와 개인의 부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가계, 기업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빚을 못 지겠다는 게 그런 관점인 거죠. 예를 들면 **정부는 빚을 지더라도 안 갚아요. 역사적으로 정부는 갚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는데, 대체로 안 갚습니다. 대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분모가 되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빚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안효상 그렇죠. 누가 독촉할까요?

전용복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민간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설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빛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는 절대로 빛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신자유주의 교리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효상 한국 정부, 기재부가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따가 더 말씀해주시기로 하고, 금민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금민 일단 백신이 1년 반이면 나올 거라고 그러고,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박테리아를 이겼죠. 박테리아로부터 해방이 된 건데, 이에 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상당히 오래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인간은 어떤 바이러스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변종이 생기고, 이걸 자연파괴와 관련이 돼 있고, 인간이 너무 많다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인류학적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바이러스에 맞서는)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그런 (바이러스와 인간 의학의) 경주 상태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건 사회건 국가건, 팬데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정상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3개월 후면 괜찮아, 조금 있으면 공장 가동할 수 있어, 1년 반 후에 백신 나올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혹 1년 반 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1년 반 동안 비상경제는 새로운 놈(norm),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국가가 대응을 잘했다 — 한국이 대응을 참 잘했죠 — 거의 국뽕처럼 얘기를 하고, 신문에서 다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성공적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 사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민국가가 그때그때 반응을 잘 할 수 있지만 국민국가가 영원히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 국민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사실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없다면 국민국가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세계화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겠죠. 과도한 세계화 자체가 생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우타르키(Autarkie), 즉 모든 것의 자립경제는 가능하냐 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시계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한꺼번에 자립경제 달성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국민국가도 국경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100% 방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건, 이게 정상 상태라면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건가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건 뭐고, 끝까지 고수해야 할 건 뭔가, 이런 논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상 강남훈 선생님께서 기재부라든지 한국정부의 대응을, 다른 나라의 대응과 비교해서 말씀해주시죠.

강남훈 우리가 방역은 아주 잘했는데요. 경제를 멈추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방역은) 잘됐는데, 경제 정책은 재난시기에 아주 후진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역이 더 중요하니까 방역효과가 있지만 경제 정책이 후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불평등이라는, 바이러스가 불평등하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불평등 부분이 기후위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석탄을 조금이라도 때면 지구가 망해서 다 죽는다, 내일부터 때지 말자, 전 세계 지도자가 결의해 놓고 나면 그날 저녁으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얼어 죽는 거죠.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식품 사려고 못 걸어 다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죠. **훨씬 더 불평등이라는 게 재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

를 이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데, 위기극복이나 불평등 완화 같은 마음이 기재부에는 전혀 없는 거죠. 재정 건전성만 지킨다고 하는데, 제가 마침 <세계 대공황의 교훈>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안효상 이 책은 PPL이 아닙니다.

강남훈 피터 테민(Peter Temin)이라는 원로 대학자가 세계 대공황이 왜 일어났고, 왜 오래 갔나를 분석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 우리는 수출주도 국가잖아요. 전세계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 경제공황은, 위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929년 수준의 GDP를 1939년에 회복하거든요. 딱 10년이 걸렸는데, 그 원인을 이 대학자는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았습니다.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이, 그 당시 금본위제의 고수로 상징되는 건전재정정책이, 대공황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정책은 디플레이션을 만성화한 여러 정책들 중 최악의 것이었다는 것이, 이 대학자가 세계 대공황을 분석한 결론입니다.** 기재부가 보여주는 잘못된 경제 신념, 건전 재정성이라는 신념, 저 신념을 갖고 있는 한, 이 위기에서 제대로 못 벗어나고 이 위기를 오래 끌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안효상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남훈 재난소득 — 기본소득을 붙이지 말자고 하면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 어쨌든 재난소득을 전세계적으로 다 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0%까지는 주는 것인데요, 기재부의 그 건전재정 때문에. 그것도 전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좋아지는데, 회복이 빨라지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면 — 다른 예산도 써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 그걸 줄여서 이걸로 쓰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참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쨌든 70% 주느냐, 100% 주느냐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당과 청와대의 일부는 100%를 주자고 하는 것 같고요. 기재부나 청와대 일부는 70%를 주자는 것 같습니다. **70% 주자는 말은 돈이 없다는 거죠. 재정건전성 지키려면,** 지금 7조도 다른 거 겨우 줄였다, 스텔스기도 못 산다, 나눠주느라고 하면서. 결국 여당에서 100% 주자고 한 건,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70%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사람들의 위화감을 만들고 하나된 마음을 만드는 데 얼마나 장애를 주는지를 체험한 것 때문이죠.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두 분 다 비정규직입니다. 맞벌이인데, 좀 나은 비정규직이에요. 원청에 가서 일하지만 하청에서는 정규직인 분인데, 두 분은 건강보험을 합치니까 상위 3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이 분은 자기는 평생 민주당만 찍어왔는데, 이번에 안 찍거나 다른 당 찍어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마침 선거 끝날 무렵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100% 주자고 얘기해서 찍었다고. **70% 지급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득 역전이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70%와 71% 차이는 소득이 10만 원도 안 나는데, 70%인 가정에 100만 원을 줘버리면 70%가 71%보다 더 잘 살게 돼 버리는,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경제는 시장의 질서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복지로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가령 나와 저 사람의 소득 차이가 100만 원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원금으로 99만 원을 받고 나는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차이는 1만 원이 나요. 역전은 안 됐지만 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비례적으로 줄어야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재난 소득을 줄 때 그 격차가 비례적으로 줄도록 점감구간을 설정했어요.

안효상 75,000달러인가요?

강남훈 가구소득 85%까지는 전액을 다 받아요. 하위 85%까지는 다 받고,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5만 달러 인데요. 1만 달러 넘어갈 때마다 500달러씩 재난소득을 적게 줬거든요. 그게 95%까지 갑니다. 격차가 1만 달러에 500달러니까 격차의 95%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잖아요. 노동시장의 유인도 안 깨트리고.

제가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소득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위 20%에게 100만 원을 주려면, 5%씩 점감구간을 만들고 —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보니 — 58%인 사람까지 점감구간을 만들어야 해요. 선별하자는 사람들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줄 걸 하위 20% 주면 500만 원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하위 20%에게 200만 원을 주잖아요? 점감구간을 만들면 하위 79%인 사람까지 점감구간을 만들어야 해요. 하위 20%에게 300만 원을 주잖아요? 88%까지 점감구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진짜 다 주고, 나중에 과세하는 게 좋거든요. 청와대가 제발 이번에 좋은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여기](#) 클릭)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안효상 재난기본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대응과 관련해서 전용복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확정적 재정을 주장하신 만큼, 속 시원하게 들으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용복 답답하고 할 말 많습니다. 청중과도 공감을 해야 되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만 마디 말보다 예산이 진심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현금이 진심이듯이, 아무리 정치권에서 미사여구를 구사해서 뭐라고 해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정치적인 언술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예산을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 규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뭐냐? 저는 정부 역할의 후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완충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안 하거든요. 정부의 후퇴를 나타내는 지표가 예산, 긴축재정이라는 거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죠. 정글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깨지고 회복하기는 어렵죠**. 사실 신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게 별 게 없었습니다. 1979년도에 대처가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그 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짜 돈은 없다, 세금밖에 없다.

예산을 그렇게 본 겁니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 영국 정부가 적자였으니까 기존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정부는 더 이상 예산 적자를 안 볼 거니까 세금 더 내라. 당연히 사람들이 거부했죠. 그런 다음에 대처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개인으로서 남자, 여자, 가족만 존재할 뿐이다, 사회 같은 건 없다. 그러면서 사회를 파괴한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대처는 — 그분이 경제학적인 소양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본능적으로 파악을 한 거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다, 예산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짚돌이인지, 사례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조금 공부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흔히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기준금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강제로 금리를 어떻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중에는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은행들끼리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단기 자금시장에서 우리나라는 7일씩 빌리는 금리가 있습니다. 7일물 금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일물 금리를 목표 금리로 하죠. (7일물 금리를) 목표 금리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 금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내려야 되겠죠. 근데 강제로 내릴 수 없으니까 —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 돈을 공급해야 하죠. 그걸 헬리콥터처럼 뿌릴 수는 없고, 돈을 주긴 주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통 국채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채권을 안 하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시중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겠죠?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도합니다, 팝니다. 매도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국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말에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웃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워낙 신자유주의 정책에 경도돼 있어서, 호주와 캐나다도 국채 발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시중에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채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에 국채 좀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다른 방법도 고려를 했죠. 그러다가 어쨌든 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위해서 발행을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분석에 따르면, 왜 그러냐 하면 **2월 말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를 보면 한국은행은 약 16조 좀 넘는 규모의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스스로 발행한 통화안정화 증권, 즉 통안채인데, 통안채 발행액이 170조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한,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170조 정도의 국채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정부가 발행해주지 않으니 한국은행에서 스스로 발행해서 하는 거죠.** 당시 호주와 캐나다 정부도 이 안을 생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할까 그랬다가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 때문에 그러지 말고 국채를 발행하자, 그렇게 했던 거죠. 또 하나 방식이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Fed)가 했던 방식이죠. 이자를 주는 거죠. 민간 은행들한테,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 국채가 부족해서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 중앙은행 스스로가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국채가 메말라버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참에 동안**

채 170조를 국채로 바꿔주자, 그 170조를 재난대응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강남훈 좋은 아이디어예요.

전용복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지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현재와 같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건데, 그거마저도 안 한다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가 증가해야 됩니다, 통화량이. 당연하죠. 경제가 커진다는 얘기는 실물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걸 거래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돈을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빚을 지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를 공급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도 빚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빚이 많은 이유가,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빚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부채가 이렇게, 사실은 경제운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마치 민간기업을 운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좀만 더 얘기해도 되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좋습니다 — 저는 **1인당 100만 원씩 3회 정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여타 정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1타 3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3피는 넘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나라 경제진단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실업과 소득단절이 제일 문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득보전을 해주는 거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생계비 지원인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수요처는 뭐냐 하면 또 다른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예요. 또 다른 약한 부분. 이 부분이 살아나면 실업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두 피 됐죠,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돈이 어느 정도가 되면 금융 부분으로 갑니다. 모든 돈은 금융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현대는 대부분의 돈이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유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은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따로 금융안정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던 게 금융권 안정 아니었습니까? 1차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2차에서 확대됐는데, 약 48조 1000억 원 정도의 금융안정화 기금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소위 얘기해서 유동성이 가장 큰, 금융위기 시의 오매불망 모든 금융기관들이 찾고자 하는 지준금(지급준비금)입니다. 중앙은행 화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찰’이라고 부르죠. 현찰입니다. 정리를 하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금융안정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나는 기업이다’가 아니고, 나는 최고의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마음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안효상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나요?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기재부는 왜 그런지?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지피지기의 심정으로, 기재부는 왜 그런지, 어디서 근원하는지 알아야 물리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주시겠어요?

강남훈 기재부가 왜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죠? 케인즈가 〈세계 대공황에 관한 일반이론〉의 끝부분에서 “오늘날의 종교가 있다면 경제학이다”라고 했죠. 그 당시 주류경제학은 잘못된 경제학을 믿고 있었다고 했고, 케인즈가 옳은 게 나중에 다 확인이 됐죠. 잘못된 경제학을 믿고 있었는데, 제가 케인즈의 책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경제학은 현대에서 강력한 종교다, 그 강력한 종교가 끼치는 피해가 막대하다,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져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난시기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경제 신념은 관료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종교이고, 그 해악은 종교 이상으로, 신전지가 끼친 피해 못지않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안효상 중요한 답을 하셨습니다.

강남훈 관료를 설득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명령하고 국회에서 정하라고 뽑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안효상 전용복 교수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전용복 금민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1타 3피 얘기를 했습니다.

금민 그거야 뭐, 옛날에 노론이 하던 것과 비슷한 거죠. 170조 동안채를 국채로 돌려서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자는 전용복 선생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시기와 방법이 많이 논의되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규모가 그래서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 물론 다른 나라들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뿌리고 있지 않죠 — 어쨌든 다른 나라의 규모가 훨씬 크죠. 독일은 GDP 30%고, 대개의 나라는 20% 상회하죠. **한국의 재난경제대책 규모는 미미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역의 경제효과가 있는데, 현재 경제성장률 예측이 -1%로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방역효과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돈 뿌리는 걸 머뭇거리다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논의가 나왔던 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좀 유사하게 접근했고, 이 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부채의존 성장국가였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경제 재생산에서. **한국은 내수는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닌데, 그런데 한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가동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타격을 받은 게 중소기업 상공업이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사실 비정규직, 열외에 있는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수요 관리 경제정책으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문제가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벨기에에는 임금의 75%를 보존해주거든요. 영국 보수당 정부는 80%까지 보조해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주겠다는 거죠.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왜 그런 정책이 나오느냐면, 이 나라는 가동중단이라는 걸 생

각하셔야 돼요. 공장이고 뭐고 다 닫고 집에 있어야,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가동중단이기 때문에 임금소득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임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총소비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임금보존 문제보다 보편적인 총수요 관리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된 맥락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효상 한국경제 구조가 원래 그런 거라서 저희가 기본소득 하는 거죠.

금민 저야 항상 비관론자니까. 어느날 2차 파고, 3차 파고가 올지 모르고, 한국이 방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영원히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건 건신천지고요. 그러면 대안은 뭔가라는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처럼 야만경제를 할 거냐? 죽으려면 죽고, 가서 일해라 하면 할 거냐? 아니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막을 거 막고 적절한 경제대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부딪힐 거고, 가동을 하는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5차 확진까지 보고되고 있잖아요. 재확진도 일어나고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가동을 했을 때 보건에 드는 비용이 노동자 1인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할 수 있고요. 경제학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야만경제가. 그렇다면 실제 대안은 일종의 계절 실업상태가 되는 거다, 자본주의가. 가끔씩 쉬어야죠. 3개월씩 집에서 쉬고,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쉴 때 뭘 해야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항구적인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한다, 스페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실업자 780만 명에게 주자는 사람들도 있고, 포데모스(Podemos)는 다 주자고 그러고, 결국 또 실업보조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주고 해고를 금지해야 하든지, 해고를 금지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그러면 일종의 임금보조금을 준다든지, 보조적인 정책들을 배치해서 가끔씩 계절실업을 하고, 사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코로나로 중국 우한에서 죽은 사람보다 공기가 깨끗해져서 살아난 노인이나 어린이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쉬는 경제를 뉴 노멀로 생각하고, 거기 맞춰서 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정작 지켜야 할 건 민주주의**죠. 한국이 투표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야, 거리에 나오면 잡아가겠다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용복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기재부는 왜 그럴까에 대해.

금민 **그건 낡은 교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빠져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좌지우지한다는 게 문제**죠. 관료와 민주주의의 투쟁, 여기서 항상 민주주의가 져왔던 역사였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걸 뒤집지 않는 이상은 국회의원 누구를 뽑든,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든,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훈 재난소득을 기본소득 형태로 주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1년에 3개월은 쉬어야 되겠네요.

안효상 3개월만 쉬면 될까요?

강남훈 어쨌든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이면 50조잖아요. 150조, 170조 정도 되는 예산을 쓰면서 기재부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기재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 국민 다 똑같이 주니까. 통장으로 쏘 주면 되니까. 기재

부의 재량이,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80%인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를 정하는 관료들의 심사권한이 없어지니까, 규칙에 따라 예산이 나가버리니까, 자기 권한을 잃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해 왔거든요, 나랏돈을. 자기들의 심사 없이 바로 나가게 돼서 자기 권한이 없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효상 정리해 보면 세 분 다 설득해서 안 된다는 거죠?

금민 네.

전용복 분란을 일으킨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남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부채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의 위험이 있다.** 공식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게스(guess)입니다. 제가 기재부 관료도 아니고, 기재부 내부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 신자유주의는 정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경제 전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 싫은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체제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자본가라든가 기타 등등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상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기본소득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답변이 좀 나오긴 했으나, 묶어서 어느 분이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민 요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을 가능한 멀리하고 만나지 않고 그러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국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훈 대봉새조, IMF의 표현대로 하면. 그 봉쇄 기간에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지만 죽을 수 없잖아요. 사 먹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을 미국 같은 나라에서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정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황께서 이번 부활절 편지에서 기본소득을 주라고 — 정확한 표현은 ‘보편기본임금’이었는데 — 하시면서 하나하나 대상자들을 호명했어요. 아마 기도를 하시면서 다 떠올렸던 것 같아요. 여성, 아이들에게 스프를 끓이는 여성, 그림자 노동, 지금 타격을 받은 노점상,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편지 끝에서 이들에게 보편기본임금을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 그게 임금인지는 가톨릭을 아시는 분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 이 재난 속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계층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의 편지에서 “혼자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정확한 워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건 뭐냐 하면 한 사람만 거리두기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오후 8시가 되면 창밖에 나가서 박수를 치는 등 스스로 자발적인 협동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기본소득의 정신이 편지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효상 금민 선생님, 추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금민 판 파레이스(Van Parijs)가 (교황의 편지에서) 기본소득에 접근한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다는데, 가톨릭 논리로 보면 기본소득을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가톨릭의 기본소득 옹호론은 일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개돼 왔죠. 그 이유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원론이 다른데, 개신교의 경우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 즉 믿음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의 동등성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업적에 따른 구원 — 예전에 면죄부도 팔았죠 — 일을 한 것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 일의 개념을 이번 교황님이 굉장히 확장했다, 그래서 열거한 것들을 보면 거의 모든 유의미한 활동을, 유익한 활동을 일이라고 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공동체가 정한 어떤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특히 오스트리아 가톨릭의 일부 교구라든지 독일의 마인츠 교구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옹호론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복 갑자기 성스러워졌습니다, 토론이. 저는 맨날 돈 얘기, 예산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어? 이게 제 대답이거든요. 하나 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부채는 당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연히 제가 발견했는데, 잉여 예산을 봤어요. 지방정부 예산을 봤더니 — 지방정부365라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 결산자료가 2018년까지밖에 없어요. 2019년 자료는 아직 없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정부가 꾸준히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018년은 69조 정도가 돼요, 지방정부만. 돈 안 쓰고 남긴 거죠. 물론 그 돈을 당장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1년 단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왜 꼭 1년 단위로 맞춰야 하나요. 5년, 10년 단위로 결산을 맞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 또 하나는, 실제로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요,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직업재훈련 같은 사업들에 필요한 돈을 기금에서 갖다 썼습니다. 원래 실업기금인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한 게, 기금을 엄청나게 쌓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금을 엄청 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갖다 쓰면 안 되나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는 중앙은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돈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난에서는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는 빚을 져야 합니다. 재난이니까요. 그게 정의니까. 그렇다면 누가 빚을 지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개인은, 특히나 재난에 취약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내수 기반 기업들이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빚을 지면 그 이후에도, 이 재난이 설사 지나간다고 해도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들

안효상 코로나가 전례 없는 큰 사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상이다,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

하다는 점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까,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일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온라인 기술의 발전, 지구화의 후퇴, 국민국가의 귀환, 권위주의적 감시권력의 등장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 패널께서 각각 주목하는 변화의 지점들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민 어쨌건 최악의 가정도 가능하죠. 트럼프식 야만경제를 만드는 것. 트럼프는 자동화에 반대해 왔잖아요. 사실은 사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국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방역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최악의 가정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확보한 기본권은 후퇴하고, 단순히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가 어쩔 수 없이 제한받고,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팽배해지고. 이런 **가장 권위적인 야만경제**가 하나의 최악의 가정이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더 많은 자동화를 하고, 재택근무나 휴무 때 임금을 보조하고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사회개혁들의 총체로서 일종의 새로운 정치체, 새로운 민주주의가 구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인류가 깨닫게 되는, 생태재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인식의 비등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겠죠.** 아마 각국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때그때의 결정들을 할 거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볼롱테 제너럴(volonté général), 일반의지, 인민의 의지겠죠. 지금 독일 정부가 내린 권고는 접촉금지령이거든요. 2인 이상 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은 예외죠. 이런 식인데, 이게 사실상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 없으면 집회는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 형식 자체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정당(platform party)도 등장한다든지 — 한국에서 요새 얘기하는 플랫폼 정당 말고요. 선거연합정당 이런 거 아니고 —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의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안효상 강남훈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강남훈 저는 경제학자답게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경제체제, 새로운 제도, 이런 것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에서 두 주 일찍 이렇게 테스팅을 시작한 게요,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 경제성장률이 -8%일 때 우리는 -1%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조금 앞서서 대처한 것이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왔잖아요. 기후위기 문제도, 탄소 문제도 한 달만 먼저 시작하면, 다른 나라에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경제를 스톱 안 시킨 채로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탄소를 안 쓰기 위해서 경제를 스톱시켜야 하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발 앞서서 방역을 하듯이 체크해 나가는 것. 아까 막대한 가계부채로 상징됐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 투기로 일어나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사실 이런 시기가 되면 임대료를 누구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낼 수 없잖아요. 그런 불평등을 빨리 해결해야 우리나라가 또 발전한다. 역사적인 시기에서는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 그런 나라도 앞서 가지만,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앞서 나가는 경제의 긴 역사를 보면 기술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도 함께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제도의 특징은, 역사의 교훈은, 단순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평등하고,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을 포용하면서 생산된 부를 골고루 나**

누는 나라,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영국이 제패한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투표권을 주어서죠.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링컨이 토지를 분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기본소득도 결국은 — 만약 이게 금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뉴 노멀이 된다면 — 다 주게 될 텐데, 한 발 앞서 가면 경제성장률에서 몇 % 격차가 나는 거죠. 그게 몇 년 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잘하고, 방역도 잘 하게 됐으니까, 좋은 제도도….

전용복 저는 당위 얘기보다는 실천전략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어떤 관점,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신자유주의가 균열을 맞느니,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들어온다느니, 앞으로 생태를 위해서 탄소저감노력이 더 증가할 것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본가들이 그걸 쉽게 포기 안 할 겁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급투쟁의 문제일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계급투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 저한테 유리한 것 말고요 — 자연한테, 지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2010년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재선임 투표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논의가 세간에 뜨거웠습니다. 그게 당시만 해도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대권을 노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베풀을 한 거죠.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대가로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선임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배하고,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서울시에 도입됐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서 10년 이 지난 지금은 그 누구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걸 새로운 규범이 형성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난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그런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자고 제안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죠. 그다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남, 경남, 이런 식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거든요. 이제는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향후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170조를 즉각 지불한다면 기존 신자유주의 규범이 크게 파손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더 이상 돈 없다는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가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뭔가 트리거(trigger)를 당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재난기본소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규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안효상 금민 소장님, 묘사만 해주셨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금민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해야죠.

안효상 다른 정치나 민주주의를 아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민 사실 사회적 투쟁의 방향에 따라서 최악과 최선 사이의 어떤 값이 나올 텐데. 한국은 거리에 자주 모일 수 있잖아요. 집회를 할 수 없지만. 여기(라이브토론회 촬영장)에도 10여 명 앉아 있고. 이것도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혼자 앉아 있어야 하는 나라. 그러면 사실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다른 방식이 창출돼야 할 거다. 줌(Zoom)이 지금 우버보다 더 시장 가치가 높잖아요. 줌은 이 재난에서 갑자기 떠오른 기업인데, 그렇다면 **저항정치 또는 진보정치 역사 레프트 줌 같은 게 있어야죠.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실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불만의 개인화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종의 위기, 즉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 가운데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나눌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멘탈 위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멘탈 위기를 겪고 있는 증거거든요. 멘탈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라 복종하는 신민이 돼 버리는 꼴이 될 거다, 그러니 다른 소통의 형식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훈 제도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여당이 180석이 되었기 때문에 — 보통은 대통령 취임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 **정부조직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5가지 일을 하거든요. 기획, 예산, 거시, 금융, 세금, 이런 5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나라들은. 그중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듯이 기획과 예산을 합쳐서 미국처럼 청와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산에 구애를 안 받고 막강하게 예산을 쓰잖아요. 장벽도 다 건설하고, 돈도 팍팍 나눠주고, 미국은 95% 나눠 주는 거거든요. 뉴욕주 주립대 교수들을 보니까 부부가 교수인데, 트럼프한테 재난수당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쨌든 선출직의 뜻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건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산 부서를 백악관으로 넣으면서부터였거든요, 재선하자마자. 처음 4년 임기 동안 기재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예산을 자기들이 만지는데, 정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재선해서 예산 부서를 백악관에 넣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넣고 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재난소득 필요한데, 마련해 와, 하면 마련해 오는 거예요. 기재부 관료들 진짜 똑똑하거든요. 만들어와요.

전용복 저도 하는데요.

강남훈 대통령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마련했어?’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있지만 180석의 첫 번째 기점으로, 누구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정부 조직을 바꿔서 기재부를 청와대에 넣으면 대통령께서 이 재난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역사적으로 남는 업적을 이루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안효상 민주주의의 기초와 정부의 책무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전용복 교수님은 보태실 말씀이?

전용복 너무 길어져서, 말하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대안 또는 전망, 실천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후쿠야마인가요? 역사는 끝났다고 했죠.

안효상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전용복 최근에 (후쿠야마가) 반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의,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우후죽순으로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건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 내의 비자본주의 영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지금도 좀 존재하긴 하지만, 확장을 하고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자본주의 영역과 경쟁할 수 있는, 때로는 자본주의 영역을 위협할 수 있는 이원체계를 갖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가치에 따라서 돈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본주의 영역에 가서 좀 더 빠르게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비자본주의 영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로드맵은 뭐냐? 실행전략은 뭐냐? 저는 화폐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화폐를 공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폐라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지금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화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화폐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화폐의 발행과 공급의 권한이 주권자에게 주어진다면 그 화폐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자본주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착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상 제가 질문을 전망과 실천전략으로 나눠서 했는데, 말씀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마지막으로 못다하신 말씀을, 실천전략 중에서 빠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민 소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금민 전용복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몇 마디 덧붙여보겠습니다. 당연히 국가 화폐 — ‘주권 화폐’라고 번역하죠 — 소버린 머니(sovvereign money)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이 팬데믹 상황이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에서 출발해서 주권 화폐까지 가는 경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완화 문제에서, 예를 들어, 얼마 전 BBC 토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동성이 6개월 밖에 없다. 돈 꺾주고 그래 봐야 얼마 안 된다, 그냥 국가가 사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그런 모델이죠. 니더작센 주가 최대 주주일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국가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만 사지 않고 회사채라든지 심지어는 증권 같은 걸 사들인 케이스가 많죠, 유럽에. 근데 산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되팔아요, 사정 좋아지면. 그건 거의 역진적인 재분배를 하는 거고, 재난 때 부자 도와주기, 자본 도와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국가가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정이) 좋아졌을 때 그 이익을 공유지분권으로 생각하고,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배당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이번에 경제재난상황이 제임스 미드(James Meade)가 생각했던 아가소토피아(Agathotopia)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다,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기본소득 모델이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기업인데 국가의 재정투자, 투자가 필요하다면 (재정을 넣어서) 지분을 획득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비자본주의적인 영역들이 커지는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상 다른 두 분 말씀 전에 댓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 아까 금민 소장님이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 방역국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역국가가 일상화될 때 과연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민주주의 행위 양식을 개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세 문제인데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기본소득을 주는 것과 함께 결국 증세를 얘기해야 하는데, 재난상황이 시급해서 그런지 증세 논의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좀 밀려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소강되어도 문 정부가 감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증세 요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질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용복 선생님의 입장이 궁금하시다고. 이런 재난상황에 국한해서, 즉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전제로 할 때만 기본소득 같은 것이 필요한지, 이 재난상황이 극복되고 일상성이 회복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기본소득과 일자리 보장 어느 게 더 낫다고 보는지?

금민 재난상황이 극복 안 된다니까요.

안효상 금민 소장님의 입장을 택하면 재난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거니까 질문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금민 큰 재난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간헐적 재난 속에서 사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안효상 전반적인 전망이니까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증세 문제하고 정책으로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이 꼭 대립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전용복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은 정말 날카로우신 분이네요. 제가 최대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기본소득 좋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전이 짜여지고 그 안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세 이야기, 증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 좌절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얘기하시면 제 잘못이죠. 다음에는 길게 저한테 2시간만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원리상 조세는 정부 지출, 또는 정부 재원수단이 아닙니다. 원리상.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세금이 필요하냐? 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쯤? 만약 저를 기재부 장관 시켜준다면 매년 100억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효상 100조.

전용복 죄송합니다. 100조 정도. 그렇지만 정부 부채가 좀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세금 걷자고 안 할 겁니다. 제 입장입니다.

강남훈 마지막에 반복하고 싶은데요. **행정조직에 주권자의 주권이 미쳐야 하는데, 주권자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반 부처 관료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한 주인은 대통령이고요. 인사권이 일부 있으니까, 고위직에. 또 한 주인은 기재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데, 이 기재부가 더 무섭습니다.** 매년 예산을 가지고 다른 관료들을 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신들의 주권이 그분들의 공약이행을 통해서 잘 실천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기재부라는 숨은 주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가로막혀서

공약이행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미국 대통령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를 청와대에 넣는 건 민주주의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적 결정을,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금민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자꾸 시간이 늘어나는데, 괜찮아요?

안효상 말씀하세요.

금민 일단 유럽은 예산법률주의예요. 예산은 법률이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만듭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국회처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의회 내각제에 의해 돌아가는 거죠. 미국도 예산법률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백악관이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법률주의는 사실 의회에서 만들었던 건데, 의회에서는 심의하겠다는 대통령한테 위임한 권력입니다. 대통령한테 왜 위임할 수 있느냐?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위임받을 수 있는 민주적 정통성을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실은 예산 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 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흥정헌법적인 잔재다, 예산 비법률주의는. 국회는 예산의 심의의결만 하지, 예산안은 행정부가 내는 거죠. 그런데 예산안을 내는 부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재부죠.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예산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권력, 즉 선출된 권력이 보장하는 위임받은 권력인 공무원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국회는 심의의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 자체가 옛날의 왕정예산 비슷한 겁니다. 대통령이 쓰실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관료들이 뽑아서 국회에 묻는 거죠. 국회는 된다, 안 된다만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바깥에,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먼 쪽에 있는 예산제도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약간의 보충설명이었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한에서는 청와대로 가져가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각제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안효상 이 사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전용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폭로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 같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은 많다, 돈이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역동적이긴 하나 민주주의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고, 금민 소장님이 마지막에 그걸 교과서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속에서 미래를 엿보려면, 아까 전용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전망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상의 시기에 긴급한 사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점, 재난기본소득으로 170조를 깔아야 되고, 더불어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식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점, 이런 말씀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도 충분히 다 이야기를 못 나눴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